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해리스나 트럼프나 7개 경합주가 결정

오늘 미국 대선...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 확보해야 승리

미국은 5일(현지시간) 전역에서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한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

〈관련기사 10면〉

하지만 여러 주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이미 결정됐고, 정작 승패를 좌우하는 곳은 어느 후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 7곳이다.

특정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주는 전체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철혈성인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54명은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의 40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이 확실시된다.

7개 경합주를 제외한 4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때와 같은 결과를 재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선거인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작하게 된다.

이후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총 93명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승자를 결정한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장 가능성이 큰 승리 공식은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19명),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 등 북부 3개 주를 모두 가져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 (Blue Wall·파란 장벽)로 불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민주당의 아성에 균열을 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것으로 나타나지만, 펜실베이니아는 안겟속이다.

나머지 4개 경합주는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 (Sun Belt)에 속한 남부의 조지아(16명)와 노스캐롤라이나(16명), 서부의 애리조나(11명)와 네바다(6명)다.

여론 조사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대체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두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조합이 있지만, 미국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의 블루월 수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벨트 + 펜실베이니아'를 가장 많이 꼽는다.

두 후보의 승리 공식 중심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가 이번 대선의 '열쇠'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경합주 중 가장 핵심인 펜실베이니아에 자금과 시간을 집중해왔고, 두 후보는 대선 전날인 4일에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최후의 유세 대결을 펼쳤다.

한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두 후보가 각각 269명을 확보해 선거인단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거인단 단속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미국 대선은 각 주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 지지 후보에 대해 투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결정되고, 나중에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 투표 결과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득표가 동수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 1월 3일 새로 출범하는 119대 의회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하원에서는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한다.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 코스피 급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투자자 고려” 폐지 결론 지역 증권가·개인투자자들 반기는 분위기...연내 법 개정 완료될 듯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유예기간 종료로 2개월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4일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는 금투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증권가와 자본시장, 투자자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된 만큼 폐지 이후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 규모와 관계 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규모를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0~25% 세금을 부과하는데, 광주·전남 투자자의 경우 타지역 대비 비교적 코스닥 주식의 소액 주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고,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등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도 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찬반 논의를 해왔지만, 이날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금투세 법 개정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하다. 맘껏 돌려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그어 있다”며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지난 9월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3조1661억원(매수 1조6246억원·매도 1조5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8001억원(매수 9088억원·매도 8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는 고액 투자자가 많지 않고, 전반적인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 및 국내 주식 저평가 문제를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민감도가 높은 만큼,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 코스닥 시장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오를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코스닥 주식 매수가 3.4%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 오른 2588.97에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25.03포인트 오른 754.08에 장을 마무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OK! Now Jeonnam

OK! Jeonnam 이제 전남으로 가자

OK! NOW 이제 전남을 주목하자

OK! 이제 전남이 세계로 웅비한다

New Opportunity With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